

제의 효율적 운영, 시민권의 증진,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거나 행정관리국(인사행정과) 사무에 있어 3급 이상 보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5급 이하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당해기관(4급 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 내 전보,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명령, 호봉승급중 호봉승급은 실·국·본부별 책임경영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며

- 법령개정으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23개 사무, 법령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58개 사무,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31개 사무, 위임내용을 명확히 하는 1개 사무, 기타 32개 사무 등에 대한 보완·정비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1조와 제5조제1항의 “구청장·사업소장 및 시의회 사무처장”을 “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보조기관에도 사무를 위임하고 사업소장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용어정리하는 것으로 별도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서울특별시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구청장·사업소장 및 시의회 사무처장”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구청장·사업소장 및 시의회사무처장”을 “시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市立技能大學閉校(職業專門學校)의 還元

反對請願 提案說明

申炯植議員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서울시립기능대학을 폐지하려는 서울시 집행부의 방침이 잘못된 사실

을 발견하고 이의 폐지를 반대하는 서울시민 4,000여명의 청원을 소개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1995년 당시 기능대학 설립계획서에서 설립목적에 장황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산업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기능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고급기술자에 대한 산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급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기능대학법 제1조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또는 다기능기술자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치하고, 제2조에서는 다기능기술자라 함은 관련분야 2 이상의 직종에 관한 실기기술과 당해기능을 기술이론분야의 영역에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서 개교한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시가 설립한 시립기능대학이 개교한 지 1년 단 한번의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한 채 폐교한다는 방침은 너무나 졸속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폐교방침의 배경으로 예산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시립기능대학 예산은 '97년도 58억원, '98년도 68억원, '99년도 47억원 등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설투자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간의 인건비의 지출만으로도 학교의 운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투자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교로 인한 예산절감보다 사장에 따른 예산낭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8년도 입학생 132명 가운데 보호자월수입이 70만원 밑도는 학생이 10명, 100만원 이하가 63명, 200만원 이하가 47명으로 집계되고, 200만원 이상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학생들은 가난하면 고급기술 배울 기회도 얻지 못하고 단순기능만 배워야 한다는 논리라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즘 지방정부가 고급산업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 등에 공급해야 할 것으로 최근 들어 기능대학이 늘어가는데 추세에 유독 서울시만 기능대학을 폐교하

려 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기능대학의 높은 취업률과 서울시의 공신력을 믿고 입학한 것입니다.

지난해 입학생들의 경쟁률은 무려 15:1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왔으며 다른 대학에 합격하고도 기능대학을 택한 경우도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기혼자도 7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한 서울시의 공신력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서글픈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능대학을 폐지하고 대신 기술전문학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나 그 비용이나 기능대학으로서의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나라에는 박사·석사학위를 받은 최고급 인력도 중요하지만 중급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교육은 백년대계하라는 말이 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市立技能大學閉校(職業專門學校)의 還元
反對請願 檢討報告

검토의견

- 서울시립기능대학은 기술이론과 실기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기술자·기능장 등 고급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서 기능전환하여 기능대학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조례를 제정('97.12.5), 시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98년 3월에 개교 운영하고 있으나
- 서울시에서는 '98년 12월 29일 2단계 구조조정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시립기능대학은 직업훈련전문학교로 전환키로 하며, 그 시행시기는 2000년 3월로 하고 '99년도 신입생은 기능대학과정(다기능기술자)을 제외한 직업훈련과정만을 모집중에 있음.
- 시립기능대학폐교(직업전문학교로의 환원) 반대에 대한 청원인들의 청원요지와 소개위원의 소개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금번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행

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는 시립기능대학의 직업훈련전문학교로의 전환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볼 때 본 청원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신중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請願要旨書

(다음 페이지에 계속)